



문서번호 : 19-4-미군문제연구위원회-1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제 목 : [민변][미군위][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전송일자 : 2019. 4. 1. (금)

전송매수 : 총 2 매

### [보도자료]

##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향후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경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미군위')는 4월 1일 (월)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배포하여, 제10차 특별협정안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는 주한미군의 모든 주둔비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위비 분담금은 당연히 줘야만 하는 것도, 매년 인상해 줘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고 인상률이 8.2%에 이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운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1년과 연동해 볼 때 제11차 협상에서 사실상 최소 인상률 8.2%를 보장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는 점' · '협정의 유효기간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 점' ·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에도,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위 특별협정에 포함된 점' · '인건비 분담률 대폭 인상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향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우려를 가중시킨 점' ·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독

소조항인 연장조항이 포함된 점' 등 구체적인 이유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은 "당장 올해 시작될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것이 분명함을 경고하고, 구체적으로 제10차 특별협정안이 그대로 비준동의된다면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 자체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토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또다시 포함되고, 인건비 분담률이 대폭 증가'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군위는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

■ 첨부 1.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1부.

2019.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